■ 민족문화연구 제84호(2019.08.3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pp.131-177.
http://doi.org/10.17948/kcs.2019..84.131

【특집2: 삼일운동과 지역】

농촌지역 3.1운동 확산과 공간적・형태별 특성*

이송순(李松順)**

목 차

1. 머리말
2. 지역별 운동 전개 양상과 특성
3. 주도세력에 따른 운동 전개의 공간적 특성
4. 운동 발생공간의 형태별 특성
5. 맺음말

국문초록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총독부 각 기관이 생산한 3.1운동 관련 자료를 총합하여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3.1운동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919년 식민지 조선의 행정구역은 13도 220군 2,509면이었다. 3.1운동은 전국 220개 군 중 212개군(96.4%), 2,509개 면 중 1,019개 면(40.6%)에서 일어났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조선의 행정구역은 13도 317군('옛군')이었다. '옛군' 단위로도 289개 군(91.2%)에서 3.1운동이 발생했다. 통폐합 이후 220개 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군청소재지면의 3.1운동 발생 비율도 86.8%였다. 이는 한반도 거주 주민들의 80% 이상이 3.1운동의 발발과 그 내용 및 의의, 경찰・헌병의 탄압 양상도 공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다음은 3.1운동 주도세력별 공간적 특성이다. 천도교는 교구를 활용한 독립선언서 배포와 천도교도들의 조직적인 시위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천도교 벨트/존'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도들의 조직적인 운동 참여가 있었다. 반면 기독교는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특정 지역성을 보이지 않는다.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상북도 지역에서 기독교도의 주도 및 참여에 의한 3.1운동이 발생했다. 학생세력은 보통학교 학생이 참여했는데 특히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은 보통학교 학생시위가 군내 시위의 첫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마지막으로 3.1운동 발생 공간의 형태에 따른 특성이다. 3.1운동의 발생공간으로 주목되는 것은 장터(오일장)시위, 관청시위, 산상-봉화시위가 있다. 장터시위는 주변으로의 운동 확산에 유리했고, 대규모 시위인 경우가 많았다. 관청시위는 면사무소, 경찰(헌병)주재소 등 식민통치기관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것으로 대응 폭력에 의한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상-봉화시위는 시위참여자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독립과 식민지배 저항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야간에 산 위에서 봉화를 활용하였다.

주제어: 3.1운동, 행정구역, 군, 면, 천도교, 기독교, 보통학교, 학생, 독립선언서, 만세시위, 오일장, 면사무소, 경찰, 헌병, 봉화.

1. 머리말

3.1운동은 한국 근대사에서 '전국적・전계층적・민족적' 대규모 독립운동이었다는 역사적 평가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해방 이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역사적 연구는 계속되어 그 연구는 풍부한 편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광복7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사 연구에 대한 총괄적 정리 및 3.1운동에 대한 해방 이후 연구성과와 과제에 대한 총정리가 이루어졌고,[1]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1990년부터 2018년까지 30여 년간 241편의 3.1운동 관련 연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2]

1) 이정은, 「3.1운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광복70년,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2016.
2) 정용욱, 「3.1운동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현실』 제110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

먼저 해방 이후에서 1960년대까지 남한학계의 3.1운동 연구의 총결산은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맞아 동아일보사 주관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연구한 76개 주제의 논문을 수록한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발간이었다. 1970-80년대는 국사편찬위원회와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이 본격적으로 3.1운동 관련 연구업적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는 민주화운동이 활발해지면서 3.1운동 연구에서 민족대표가 비판되고 역사발전의 주동력으로서 '민중'이 부각되었다.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 『3.1민족해방운동연구』[3]는 반제반봉건운동의 물적 기초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민중의 변혁주체로의 등장, 운동 양상에 대해서는 민족대표 등이 주도한 초기 발발단계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대중화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종래의 '지배자 일본 대 저항자 한민족' 구도에서 3.1운동의 운동주체를 '민족(대표)과 계급' 또는 '지식인과 민중'으로 재구분하고, 운동방식의 '비폭력과 폭력', 운동공간으로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이중성을 부각시켰다.

2000년대 이후 3.1운동 연구는 지방적인 면이 강화되었다.[4]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진전과 맞물려 있으며, 남한 전역의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3.1운동 자료집 간행이 이어졌고,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등에서 정보화사업을 진행하여 소장 자료와 발간물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DB화하면서 보다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한편 2009년 3.1운동 90주년을 맞아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에서 9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물이 『1919년 3월 1일에 묻다』[5]로 출간되었다. 이 연구는 1990년대 이래 인문학 연구경향의 변화를 3.1운동 연구에 접목시키고자 했다.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이어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평가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역사연

3)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4) 2000년대 이후 각 지역 3.1운동 관련 연구 성과는 60건 이상으로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수원, 화성, 강화, 인천, 안성, 포천, 廣州, 김포), 충청북도, 충청남도(청양, 홍성, 대전, 서산, 대호지, 서천, 당진, 온양), 경상북도(영덕, 의성, 대구, 청도, 안동, 성주), 경상남도(마산, 함안), 강원도, 전라북도(옥구), 전라남도(광주), 황해도(수안), 평안북도(선천, 의주, 정주) 지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지역별 연구논문 현황은 이정은, 앞의 글, 2016, 69-72면 각주 70) 참고.

5) 박헌호·류준필 편,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 출판부, 2009.

구회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사학을 모색하고자 100년간 이루어진 3.1운동에 대한 기억과 상식, 실증적 분석, 3.1운동 전후 세계사적 변동을 망라하는 총서를 발간했다.[6]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탄생[7], 평화의 메시지[8], 민주주의의 가치[9]로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3.1운동은 전국적 운동이었던 만큼 개별 지역 사례연구와 함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1971년 『독립운동사』[10]와 2009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11]가 간행되었고, 대표적인 지방 시위 사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2]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구체적인 지역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각 연구마다 활용된 자료의 불균등으로 지역성과 전국성을 아우르는 3.1운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1운동은 그 규모가 전국적이고 참여인원도 많았던 만큼 관련 자료를 망라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3.1운동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기초자료 정립이라는 기본적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과연 3.1운동의 전체적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이에 대해 현재 일반적인 3.1운동의 규모는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독립운동 일람표〉에 의거하고 있다.[13] 『한국독립운동지혈사』와 함께 『한일관계사료집』(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사료편찬회),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김병조)는 3.1운동 당대의 운동세력에 의해 출판된 자료인 만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고 그 내용에

---

6)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1-5』, Humanist, 2019.
7) 박찬승, 『1919—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8)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9) 김정인,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책과함께, 2019.
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2 : 3.1운동사(상)』,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3 : 3.1운동사(하)』,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1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김정인・이정은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 : 국내 3.1운동Ⅰ-중・북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김진호・박이준・박철규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 국내 3.1운동Ⅱ-남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김병기・반병률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1 : 국외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2) 이정은, 『3.1독립운동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한국사연구회 편,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경인문화사, 2019.
13) 총 집회수 1,542회, 참가자 2,023,098명, 사망자 7,509명, 부상자 15,961명, 체포자 46,948명, 불탄 교당 47개, 불탄 학교 2개, 불탄 민가 715호.

대해서도 실효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 역시 편찬자의 정치적 입장 및 활동영역, 자료편찬의 시기적·공간적 한계로 인해 실제 통계와 수치의 정확도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14] 이에 3.1운동의 또 다른 당사자(가해자)였던 조선총독부 각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를 총합, 정리하는 최대한의 자료 집성이 필요하고 이를 임시정부를 비롯한 당대 운동세력이 편찬한 자료와 비교하는 것도 3.1운동의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내외의 3.1운동 관련자료를 총합하여 자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9년 2월 20일 웹사이트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개통했다.[15]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에는 2,464건의 3.1운동 개별사건이 구축되어 있다. 현재 활용 가능한 3.1운동 관련 자료의 집합체인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는 3.1운동의 전체상을 재구성하고 특성을 검토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향후 3.1운동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의 3.1운동 시위정보 DB를 활용하여 2개월여에 걸쳐 전국적으로 전개된 3.1운동의 공간성에 대한 거시적(macro) 분석을 하고자 한다.[16]

근대 사회에서 도시와 농촌은 구성과 역할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10년의 식민통치가 이루어진 1919년 3.1운동은 공간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 주체와 시위양상, 시기 등에서 상당한 차이와 특징을 보이며 전개되었다. 본 연구는 1919년 당시 12개 부를 제외한 한반도 내 '13도 220군' 단위의 농촌지역에서 보여준 3.1운동의 공간적 특징과 운동 형태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17]

---

14)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제99호, 서울역사편찬원, 2018.

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특징, 이용방법 등은 데이터베이스 '소개'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http://db.history.go.kr/samil/home/introduce/introduce_content.do(2019.02.20 검색).

16) 3.1운동은 한반도 전역과 만주지역과 중국 관내, 러시아 연해주 지역, 일본 및 미국 등 당시 한국인이 거주했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다. 한반도 밖의 재외동포들의 3.1운동 참가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지만, 본 연구 대상은 한반도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는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이하 '삼일DB')에 구축된 3.1운동 시위정보 데이터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18] 삼일DB의 단위 사건은 집단적 시위만 정리된 것이 아니고 운동 유형을 ①시위, ②철시, ③파업, ④동맹휴학[19], ⑤계획, ⑥기타활동[20]으로 분류하여 19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선 독립을 지향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삼일DB의 모든 단위사건은 역사적 의미와 평가에서 경중(輕重)의 구별을 넘어서는 역사적 행위로 파악하여 3.1운동의 단위사건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3.1운동의 실체와 그를 바탕으로 한 역사적 평가를 위해 규명하고 분석해야 할 여러 주제가 있지만, 개인 삶의 범위(공간) 내에서 발생한 3.1운동에 대한 직간접적 경험의 여부는 이후 식민지하 조선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만큼, 3.1운동 발생공간에 대한 검토는 매우 유용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직접 만세시위에 참여하는 경우 외에도 내 고장에서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소리를 들었다", "면사무소에 붙은 대한독립만세 벽보를 봤다"라는 경험은 식민지인으로서의 비통함과 부당함에 대한 생생한 교육과 체험 현장이었다.

17) 도시지역은 산업 및 사회인프라, 거주자 구성, 통치기구의 배치 등에서 농촌지역과는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 3.1운동에 대해서는 공동연구로 진행한 염복규, 「도시 지역에서 3.1운동의 전개와 특징」, 『민족문화연구』 제84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출판 예정.

18)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는 DB구축 자료가 선교사 문건을 제외하면 운동을 탄압하고 진압한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기구, 경찰, 법원이 생산한 자료이므로 참가 규모, 희생자 등에 대한 축소 보고를 근거로 했을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전국적 규모의 파악은 통치기구를 활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고, 당시 3.1운동을 주도하거나 직접 참여한 조선인의 기록은 한정적이며, 추후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는 적어도 3.1운동의 최소치를 전체적으로 정리, 분석할 수 있는 자료임에는 분명한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은 3.1운동의 실증적 사실 규명, 전수조사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 본 논문의 데이터는 2019년 2월 20일 개통된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정리, 분석하였다.

19) 동맹휴학 분류에는 휴교 상황까지 해당된다. 즉, 조직적인 동맹휴학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불출석, 등교 거부 등의 활동까지 포함하였다.

20) 기타활동은 시위, 철시, 파업, 동맹휴학에 해당하지 않는 삼일운동 단위 사건을 포함하였다. ① 조직적인 격문・신문의 작성・배포(예: 조선독립신문의 지속적인 제작・배포 활동, 천도교계의 조선임시정부포고문 제작・배포 활동). ②3월 초 독립선언서의 조직적 배부・배포 활동(주로 천도교계열). ③청원서 활동: 김윤식 등의 조선독립청원서 활동. ④낙서, 독립선언서 등 독립 관련 문서 게시・첨부 등 개인적 활동.

따라서 3.1운동이 조선인 거주지역의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정도의 밀도로 발생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고, 3.1운동에 대한 평가에도 주요한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별 운동 전개 양상과 특성

근대 국민국가는 정치체제에서는 입헌군주제나 공화제 등의 차이가 있지만, 통치시스템은 대부분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형성했다. 중앙집권적 왕조체제였던 조선에서도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외관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했지만, 실제 외관이 파견되는 '읍치(邑治)' 지역 외에는 자연촌 단위의 '마을'이 형성되어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894년 조선왕조 근대개혁의 첫발이었던 갑오개혁에서 지방제도 개혁 방침이 마련되었고, 1895년 5월 26일(칙령 제98호) 행정구역 개혁이 이루어졌다. 조선 초기 이래의 8도제가 폐지되고 23부제(府制)가 공포되었다. 종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행정구역을 총 337군으로 단일화하고 이를 23부 아래에 분속시켰다.

그러나 23부제는 1년 정도 시행된 뒤 1896년 8월 4일(칙령 제36호) 폐지되었고 13도제가 실시되었다. 현재까지 실시되는 도제(道制)의 근간이다. 13도제에서는 지역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한성부와 7부, 1목이 별도로 신설되었다. 그 결과 행정구역은 총 13도, 한성부/7부·1목·331군으로 재편되었다.

한국 정부의 근대적 지방제도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지방제도 개혁은 결국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21] 1906년 9월 24일 지방행정 구역정리 관련 법령이 발표되었고, 그중 칙령 제49호 〈지방구역정리건〉을 통해 조선왕조하에서도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부분적인 정리에 그치고 말았던 월경지(飛地)와 두입지(斗入地)를 정리하였다.[22] 조선총독부는 강점 직후 〈조선

21) 1906-1910년까지 통감부 시기 지방제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정은, 「日帝의 地方統治體制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윤해동, 「'통감부설치기' 지방제도의 제정과 지방지배정책」, 『한국문화』 제20호,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7 참고.
22) 이정은, 앞의 글, 1992, 250면.

총독부지방관관제〉(1910.9.30, 칙령 제357호) 등 일련의 칙령, 부령을 통해 대한제국기-통감부시기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일단 유지한 채, 임시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3도(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는 그대로 두고 도 아래 1수부(首府), 11부(府), 317군(郡)을 두었다.[23] 조선총독부는 토지조사의 진전과 통치행정의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1914년 초 전국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을 단행했다. 조선총독부는 먼저 부(府), 군(郡), 면(面) 단위에서 시행하고 이어서 1914년 4월부터는 면 아래 동리(洞里)의 통폐합을 진행했다.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 30일 발포한 〈부제(府制)〉(제령 제7호)에 의해 1914년 4월 1일을 기해 12부(경성부, 인천부, 군산부, 목포부, 대구부, 부산부, 마산부, 평양부, 진남포부, 신의주부, 원산부, 청진부)에 일제히 부제를 시행했다. 또한 1914년 3월 1일을 기해 군(郡)의 대폭적인 통폐합을 단행하여 종래의 317군[24]을 220군으로 줄였다.[25] 이상과 같은 군의 통폐합으로 그 수가 2/3로 줄어든 것은 지방 중심지의 성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폐지된 군의 군청소재지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된 반면 통합 군청소재지는 이전보다 더 많은 발전의 여지를 가지게 된 것이다. 군의 통폐합에 이어서 조선총독부는 같은 해 3-4월 중 면(面)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종래 전국

23) 수도인 京城府를 보통의 부로 격하시켜 경기도 아래에 두고, 城津府, 龍川府, 慶興府를 각각 군으로 하는 한편 富寧郡(淸津府), 平壤郡, 大邱郡을 각각 부로 승격시켜 13도, 12부, 317군으로 정리했다. 이때 7부는 통감부 이사청, 거류민단의 명칭에 따라 명칭이 바뀌었다(沃溝府→群山府, 務安府→木浦府, 東萊府→釜山府, 昌原府→馬山府, 三和府→鎭南浦府, 德原府→元山府).

24) 1895년 23부제의 첫 근대적 행정구역 개편에서 조선왕조의 읍치 단위를 337개 군으로 통일 편성하였다. 1896년 13도제로의 변화에서도 337개 단위는 변화가 없었다. 1906년 일제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한국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도모하였고, 1908년부터 1910년간에 군 단위의 소폭 통폐합이 있었다. 이에 1914년 전면적인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전국의 군은 317개였다.

25) 종래의 군 중 107군을 이웃 군에 편입, 통합하는 한편 부에서 분리된 농촌 지역에서 10군을 신설했다. 신설된 군은 고양군(경성), 부천군(인천), 달성군(대구), 옥구군(군산), 무안군(목포), 창원군(마산), 대동군(평양), 덕원군(원산), 부령군(청진)이었다. 진남포부, 신의주부의 나머지 지역은 종래의 용강군, 의주군으로 편입되었다.

4,286면(1912년 1월 기준)이 2,522면으로 줄어들었다. 또 면 아래의 동리(洞里)도 통폐합되어 그 수는 6만여 개에서 28,000여 개로 줄어들었다.

1910년 강점 이후 이루어진 1914년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은 당시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통폐합 전의 317개 군은 1895년에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외관이 파견되는 읍치 단위를 계승한 것이었다. 따라서 20세기 초 한국인들의 지역 인식은 317개의 '옛군'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3.1운동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다음 〈표 1〉은 삼일DB에 구축된 단위사건을 1919년 1월 1일 기준 행정구역별(각 도별)로 정리한 것이다.[26]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14년 지방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져 13도, 12부, 220군, 2,522면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4월 이후 1919년 1월 1일까지 도, 부-군 단위의 변화는 없지만, 면 단위의 통폐합은 소폭 이루어져 2,522면이 2,509면으로 13개면이 감소되었다.[27]

〈표 1〉 각 도별 군-면단위 3.1운동 발생 양상(행정구역은 1919년 01월 01일 기준)[28]

도명	총 군수	운동발생 군수	총 옛군수	운동발생 옛군수	총 면수(A)	운동발생 면수 (B)	군청소재지(면) 운동발생 군수	미발 (군명 / 옛군명)
경기도	20	20	36	36	249	184 (73.9)	18	
충청북도	10	9	18	15	110	56 (50.9)	8	단양군 / (단양군,영춘군), 청풍군
충청남도	14	14	37	31	175	87 (49.7)	12	/석성군, 홍산군, 비인군, 오천군, 태안군, 평택군
전라북도	14	14	27	25	188	51 (27.1)	13	/고산군, 고부군
전라남도	22	19	28	20	269	37 (13.8)	15	장흥군, 나주군, 진도군 / 돌산군, 장흥군, (나주군, 남평군), 창평군, 진도군, (정의군, 대정군)

26) 본 연구는 3.1운동 발발 장소 분석 단위는 면으로, 동일 면내에서 발생한 시위는 1개 장소의 사건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운동발생장소(군, 면)의 수와 총 운동발생 건수와는 다르다. 또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3.1운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중 부(府)에서 발생한 사건은 제외하였다.

27) 경기도 1개 면 감소(강화군), 충청북도 4개 면 감소(제천군, 단양군), 전라남도 6개 면 감소(보성군, 무안군), 경상남도 2개 면 감소(산청군, 김해군), 평안남도 2개 면 감소(덕천군, 영원군)로 총 15개 면이 감소하고 반면, 함경북도 2개 면 증가(성진군, 경성군)하여 전체적으로는 13개 면이 감소했다.

28)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경상북도	23	22	41	35	272	92 (33.8)	18	울도군 / (자인군, 하양군) 현풍군, 장기군, 함창군, 울도군
경상남도	19	19	26	26	257	89 (34.6)	18	
강원도	21	21	25	25	178	67 (37.6)	19	
함경남도	16	15	13	12	142	64 (45.1)	13	문천군 / 문천군
함경북도	11	10	10	9	81	43 (53.1)	8	경원군 / 경원군
황해도	17	17	19	19	227	109 (47.8)	17	
평안남도	14	14	17	17	167	59 (35.3)	14	
평안북도	19	18	20	19	194	79 (40.7)	18	후창군 / 후창군
13도	220군	212 (96.4%)	317군	289 (91.2%)	2,509면	1,019 (40.6%)*	191 (86.8%)**	

* B/A (%): 각 도별 총 면수(A) 중 운동발생면수(B) 비율(%).

** 군청소재지면 중 3.1운동 발생 면(191개) / 군청소재지면(220개)의 비율(%).

한반도 전체 220군 중 3.1운동이 발생한 지역은 212개 군으로 96.4%였다.[29] 8개 군에 3.1운동 발생 보고가 없었으나, 이 지역에도 3.1운동 발발 소식의 전달과 그에 대한 동조 움직임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30] 한편 통폐합 전 317개 '옛군' 단위로도 289군으로 91.2%에 달한다. 옛군은 면적이나 인구수에서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이래 읍치를 중심으로 지역적 구심점을 형성하고 지연을 형성하는 단위였다.

1914년 통합군과 옛군과의 관계는 어떠하였을까. 군의 수 2/3가 감소하였는데 중남부지역에서는 2개군 혹은 3개군 이상이 하나의 군으로 통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라남도 5개군의 통폐합 전후 실태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나주군, 영광군처럼 통합되는 군 중 1개 군의 지위가 높거나 계속 단일군으

29) 12부에서는 모두 운동이 발생했으므로 220군과 12부를 합친 232府郡 중 운동발생 부군은 224부군, 96.6%였다.

30) 삼일DB에 충청북도 단양군의 시위정보는 없다. 그러나 지역 사료나 회고에는 3월 4일 만세시위 회고담, 3월 20일 횃불시위, 4월 6일 단양시위에 대한 회고 기록이 있다. 박걸순,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제15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19면.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자료의 보완과 당대의 맥락 분석 등을 통해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로 유지된 경우는 통합군의 리더십이 확립될 수 있었으나, 화순군, 강진군, 완도군처럼 옛군이 각각 독자적인 생활, 통치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통합 이후에도 옛군 단위로 중심이 분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31]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채 5년이 안 된 1919년의 지역인식은 여전히 옛군 단위의 결속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안성군, 충청남도 서산군, 황해도 연백군의 사례를 통해 3.1운동에서 옛군의 지역 영향력을 살펴보자. 안성군은 안성군・양성군・죽산군이 통합된 군인데 3.1운동에서 안성군 시위는 안성면(옛 안성군읍내)의 3월 28일-4월 2일 시위, 양성면(옛 양성군읍내)의 3월 28일-4월 1일 시위(원곡-양성 시위), 이죽면(옛 죽산군읍내)의 4월 1일-4월 3일 시위가 대규모로 각각 진행되었다. 인접해 있는 지역이므로 각 지역 시위 소식이 서로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조직적 연계나 직접적인 인적 네트워크가 작동했던 증거는 없다. 위로부터 일방적 강제에 의해 하나의 안성군으로 통폐합되었지만, 세 군의 주민 사이에는 이질적인 지역 소속감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도 안성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그 출자와 관련해서 죽산 출신인지 양성 출신인지에 대한 구분의식이 존재한다.[32]

서산군은 서산군・해미군・태안군이 통합된 군인데 3.1운동의 전개양상은 옛 해미군은 해당지역 총 5면[33] 중 대호지면-정미면 시위(4월 4일, 4월 8일)

---

31) 朴贊勝, 「植民地期から解放直後における地域社会リーダーシップの形成」,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50集, 朝鮮史研究会, 2012, 17면. 나주군은 나주군과 남평군이 통합된 것이지만, 조선시대 나주는 牧이고, 남평은 縣이었으므로 사실상 남평현이 나주목에 병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이후 나주면이 나주군의 중심지로서 역할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지만, 때로 나주 측 청년과 남평 측 유림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화순군의 경우 조선초기 화순현, 동복현, 능성현이었다가 1632년 능성현이 능주목이 되면서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1895년 모두 군이 되었고, 1908년 화순군이 능주군에 통합되었다. 1914년 능주군과 동복군이 통합되면서 군명은 '화순군'이 되었다. 그러나 옛 화순군의 세력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도 화순면은 통합 화순군의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상당기간 기존 3군의 생활권이 유지되었다. 강진군은 군 자체는 유지되었지만 옛 강진군의 중심은 전라병영이 있던 고군면이었다. 1895년 병영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역민들은 고군면이 강진면보다 큰 곳이라 생각했다. 이에 새로 군청소재지가 된 강진면이 강진군의 중심이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32) 허영란,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경기도 안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제72호, 부산경남사학회, 2009, 163면.

등 4면에서 모두 시위가 발생하였다. 반면 옛 태안군 지역의 면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연백군은 연안군과 배천군이 통합된 군인데, 옛 연안군 지역의 11면 중 연안면에서만 집중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던 반면, 옛 배천군 지역의 9면 중 5면에서 시위가 발생하는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통합군으로 살펴보는 것과는 달리 옛군 단위의 3.1운동 양상은 지역과 사람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는 도-부・군-면의 상하 위계적 통치구조를 형성하여 가능한 말단 단위까지 통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1910년대는 이러한 시스템을 형성해 가는 단계였다. 조선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조선시대 지방사회의 독특한 자치적 성격과 전통적인 중앙의 민에 대한 규제방식인 '간접적' 통제방식을 '직접적' 통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3.1운동은 향촌공동체에 뿌리박고 있던 향촌의 자율성을 해체함으로써 헌병, 경찰, 관리로 대변되는 관(官) 일방의 지배질서를 관철시키고자 한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34] 이점은 3.1운동이 발발하면 면사무소가 주요한 타깃이 되었던 것에서도 반증할 수 있다.

근대행정구역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위계구조를 갖는다는 것이다. 도-군-면 체제에서 상위계층의 행정청(도청, 군청)이 있는 행정구역은 그 지역의 중심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인프라와 인력, 정보가 집중되었다. 아직 통폐합 이전의 옛군이 지역기반을 이루었지만 220군 중 13개 도의 도청이 있는 군(府에 있는 경우도 많음)은 각 도의 중심지가 되었고, 2,500여 개의 면 중 220개 군청이 있었던 면은 각 군의 중심지로서 실제 생활범위에서는 가장 상위의 생활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각 군의 중심지, 즉 군청소재지가 있는 면(220개 면) 중에서 3.1운동이 발생한 비율은 86.8%에 달했다. 군청소재지 면에서 발생하는 일은 다른 면에서 발생한 사건에 비해 파급력이 크고 인지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군청소재지 면의 86.8%에서 3.1운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한반도 거주 조

33) 고북면, 운산면, 해미면, 대호지면, 정미면.
34) 이정은, 앞의 책, 2009, 머리말.

선인에게 3.1운동에 대한 경험이 더욱 크게 확산되고 공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면 단위의 3.1운동 전개양상은 어떠했을까. 1919년 2,509개 면 중 1,019개 면에서 3.1운동이 발생하여 40.6%였다. 자연촌인 '마을'과 동리(洞里)는 면 단위로 묶여 이웃의 개념으로 함께 살아가는 단위였다. 따라서 면에서 운동이나 시위의 발생은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직접적 경험의 범위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3.1운동 발생 면의 수가 40%였던 것은 당시 한반도 거주민(조선인)의 1/3 이상은 3.1운동에 직접적 경험을 공유했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발생 면의 비율은 각 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표 1〉). 경기도는 20개 모든 군에서 총 면수 249개 면 중 184개 면에서 운동이 발생하여 무려 73.9% 달했다. 경기도 2/3 지역에서 3.1운동이 발생하고 지역민이 참여한 것이다. 3.1운동의 최고 진앙지가 조선왕조의 수도였고, 식민통치의 수부였던 한성(경성)이었다는 점에서 그와 인접한 경기도의 발생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리적으로 경기도와 남북으로 이어지는 충청북도(50.9%) 충청남도(49.7%) 황해도(47.8%)의 운동 발생비율이 높았다. 이와 함께 3.1운동의 주도세력에 따라 운동의 중심지가 추가되면서 평안북도 의주, 평안남도 평양, 함경북도 성진, 함경남도 함흥, 강원도 평강, 전라북도 임실 등도 운동의 진앙지가 되어 주변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반면 전라남북도의 3.1운동 발생비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전라남도의 3.1운동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해 그간의 연구를 통해 제기되었던 이유는 첫째, 의병항쟁이 치열하여 피해가 컸으므로 3.1운동은 약했다 둘째, 천도교와 기독교세력의 조직이 다른 지방보다 취약했다 셋째, 일본인의 경제적 침투가 심했지만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여 직접적인 저항이 어려웠다는 것이지만, 실제 호남지역의 3.1운동 양상은 다른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35] 또한 전남의 일부

35) 김기주, 「3.1독립운동에서 호남인의 참여도 검토」, 『역사학연구』 제37권, 호남사학회, 2009, 91-100면.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維新社, 1920의 〈독립운동일람표〉에 의하면 집회 횟수에서 전북 109회, 전남 86회로 집계되는데, 이는 충남 110회, 경북 89회와 거의 비슷한 수치이다. 통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조선총독부 각 기관의 전라도지역 3.1운동 보고 및 통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생율을 보여주고 있다.

해안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위나 활동이 경찰기관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장흥군의 경우 천도교 지도부의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36] 호남지역은 3.1운동 이후 1920년부터 청년회 결성을 시작으로 1920년대 중반 사회주의 운동과 결합되면서 운동을 확대해 나갔고 신간회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1923년 암태도 소작쟁의와 농민조합 결성 등 농민운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37]

〈표 2〉는 삼일DB 시위정보에 입각한 각도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38] 3.1운동 발발과 전개의 공간성은 '전국적'이라는 평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그런 속에서 행정구역 단위의 3.1운동 발생 양상을 살펴보면 지역 차이가 있다. 먼저 독립선언서는 경상남북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하면 종교계(천도교구와 기독교도) 조직과 인사를 통해 3월 1일과 2일에 각도에 배포되었다. 시위 발생 시점은 각 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북부 지역은 3월 초에 바로 시위가 발생하였다. 평안남북도, 황해도, 함경남북도의 3.1운동 발발 양상은 종교세력의 조직적 운동이 많아 빠른 시간 내에 시위가 시작되어 대규모, 폭력적 시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중남부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북부지역보다 특정 주도세력에 의한 조직적 운동보다는 3.1운동에 대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면서 '마을' 단위에서 다양한 세력에 의한 '자발적・비조직적' 시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각 도별 3.1운동 전개 양상 및 특징[39]

도명	면운동 발생율	운동 최초발생일	운동 최종일	최초 운동 발생 군-면	대규모운동 발생군	운동의 주요 양상 및 특징
경기도	73.9%	1919-03-01 (1919-03-01)*	1919-08-29 (1919-04-16)	고양군 연희면 개성군 송도면	수원군, 안성군, 강화군	* 시흥군 모든 면 시위 발생 * 다수 군에서 공립보통학교 학생 시위로 운동 시작

36) 장흥군의 경우 천도교 지도부의 주도하에 3월 20일 이후 대덕면을 중심으로 인근 면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이용기, 「일제시기 지역 사회운동의 주도세력 변화와 그 함의—전남 장흥군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3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175면.

37) 이기훈, 『일제하 광주・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참고.

38) 각 지역별 3.1운동 전개양상은 다음 장에서 주도세력과 시위장소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39)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충청북도	50.9%	1919-03-02 (1919-03-19)	1919-04-18 (1919-04-18)	청주군 청주면	괴산군, 음성군	* 청주 천도교구 독립선언서 배포 * 청주군 산상-봉화시위 / 괴산군 양반지식인(홍명희) 주도 시위
충청남도	49.7%	1919-03-02 (1919-03-03)	1919-08-29 (1919-04-12)	논산군 논산면	논산군(강경면), 서산군(대호지면), 홍성군	* 논산 천도교구 독립선언서 배포 (-) 부여군) * 각 군 산상-봉화시위 다수 발생
전라북도	27.1%	1919-03-01 (1919-03-05)	1919-05-26 (1919-04-18)	익산군 익산면	임실군	* 천도교구의 조직적 독립선언서 배포(3월1-3일) 익산-전주-임실-남원-순창-장수
전라남도	13.8%	1919-03-02 (1919-03-10)	1919-10-09 (1919-04-19)	구례군 용방면 순천군 순천면	광주군	* 구례,순천 천도교구의 독립선언서 배포 * 광주군의 미션스쿨, 학생 중심 시위 / 공립보통학교, 서당학생 시위
경상북도	33.8%	1919-03-07 (1919-03-11)	1919-05-21 (1919-05-07)	칠곡군 지천면	안동군, 의성군, 영덕군	* 경부선철도 투석으로 시작. * 안동군의 시위 다발, 대규모
경상남도	34.6%	1919-03-12 (1919-03-12)	1919-08-00 (1919-04-29)	동래군 동래면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 동래면의 기독교도 시위로 시작 * 밀양 표충사, 합천 해인사 승려, 동래 범어사생도 시위 주도 * 5일장의 장날시위 다수
황해도	47.8%	1919-03-01 (1919-03-02)	1919-12-12 (1919-12-12)	연백군 연안면 해주군 해주면 옹진군 마산면 서흥군 서흥면 봉산군 사원면 수안군 수안면 황주군 황주면	연안군(배천), 해주군, 수안군, 신천군	* 3월 1일 천도교구, 기독교인을 통해 7개군에 독립선언서 배포 * 천도교도, 기독교도의 종교세력 강력, 양 종교세력 주도 시위 발생 -대규모, 폭력적 * 관청시위 다발
평안남도	35.3%	1919-03-01 (1919-03-01)	1919-09-28 (1919-04-16)	용강군 용강면 중화군 중화면 강서군 강서면 양덕군 양덕면 안주군 안주면	대동군, 강서군, 맹산군	* 3월 1일 천도교구 통한 독립선언서 배포 (용강, 중화, 강서, 양덕) / 안주군은 기독교도에 의한 독립선언서 배포 * 평양 중심의 기독교도 주도 시위 /동부지역의 천도교도에 의한 시위
평안북도	40.7%	1919-03-01 (1919-03-01)	1919-11-04 (1919-10-31)	의주군 의주면 선천군 선천면 정주군 정주면	의주군, 선천군, 정주군, 삭주군, 창성군	* 3월 1일 기독교도에 의한 독립선언서 배포 * 기독교도(의주-선천-정주) 주도 시위 / 천도교도(의주-삭주-창성-운산-초산) 주도 시위
강원도	37.6%	1919-03-01 (1919-03-09)	1919-05-09 (1919-05-09)	평강군 평강면 회양군 난곡면	원주군, 양양군, 이천군, 철원군	* 3월 1일 천도교도에 의한 독립선언서 배포 (1일-3일 : 평강-회양-이천-철원-김화-화천-통천) * 양양군의 시위 다발, 대규모 * 홍천, 횡성, 원주 산상-봉화 시위

함경남도	45.1%	1919-03-02 (1919-03-03)	1919-06-23 (1919-04-08)	영흥군 흥인면 정평군 부내면	함흥군, 정평군 북청군, 이원군	* 영흥 천도교구 통해 독립선언서 배포 * 함흥군 기독교도, 학생 주도 시위 / 북청군 천도교도 주도 시위
함경북도	53.1%	1919-03-09 (1919-03-09)	1919-06-19 (1919-05-08)	회령군 회령면	성진군, 길주군, 명천군	* 성진군의 미션스쿨, 선교사, 학생 주도 시위 * 길주군 산상-봉화시위 * 명천군 시위 다발
전국	40.6%					

* ( )는 '집단시위' 발생 최초일과 최종일.

3. 주도세력에 따른 운동 전개의 공간적 특성

1) 천도교 주도 3.1운동의 지역성

3.1운동 연구에서 주도세력 및 주체에 대한 연구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3.1운동 주체 연구에서 중앙과 지방의 분리, 민중의 역할이 부각되었지만, 이 역시 민중의 독자적(계급적) 이념에 의해서보다는 민족대표의 운동 지도 방향에 호응해서 일어났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3.1운동의 주도세력 중 먼저 종교계의 역할과 그에 따른 3.1운동의 공간성을 살펴보자. 3.1운동에서 조직과 발발의 도화선을 마련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천도교였다. 1910년대 천도교는 종교적 성장과 학교 교육사업을 통해 민중들의 신망을 확보하고 국내 민족운동의 주도적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천도교계에서 3.1운동과 연관되는 독립운동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18년 12월경부터로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권동진, 오세창, 최린은 이러한 정세를 인식하고 1919년 1월 교주 손병희를 찾아가 천도교 주도의 독립운동을 결정하고 3원칙(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을 결정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이러한 방침하에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 발표에 적극 나섰고,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①독립운동 전개방식의 기본원칙(3원칙) 확립, ②일원화에 따른 기독교, 불교 측과의 제휴 공작, ③선언문(청

원서, 통고문)의 기초・인쇄・발송・배포, ④대중화에 따른 교도 동원, ⑤준비공작에 필요한 자금 제공, ⑥해외운동과의 제휴, ⑦舊官 포섭의 시도, ⑧독자적 학생측 운동의 규합이었다.[40]

천도교 중앙총부의 인식 및 활동은 1919년 3.1운동의 주요한 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천도교는 독립운동에 교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활용했다. 그러한 양상은 〈표 3〉의 천도교 교세 및 조직상황과 천도교 주도 3.1운동 발생지역의 연관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표 3〉 1911년 천도교 新布德 우수지역 및 대교구, 1919년 천도교 주도 3.1운동 발생지역[41]

도	신포덕 우수지역*			천도교 대교구(1914)**	천도교 주도 3.1운동 발생지역***
	1등	2등	3등		
경기	남양(수원)	진위, 여주, 파주, 강화, 이천		경성부, 수원, 이천	경성부, 수원
충북				청주	청주, 진천
충남		홍주(홍성), 연산(논산)		서산	논산, 부여
전북		김제, 익산, 순창, 남원		전주, 익산	익산, 전주, 김제,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전남		장흥, 순천		장성, 순천, 강진	구례, 순천
경북				대구부, 경주	
경남				진주	고성
강원	이천	평강, 김화, 금성(김화)		춘천, 평강, 횡성	이천, 평강, 김화, 회양, 철원, 통천, 횡성, 원주, 영월
황해	서흥, 풍천(송화)	옹진, 문화(신천), 수안, 재령, 봉산	곡산	서흥, 안악	수안, 신계, 곡산, 금천, 해주, 옹진, 장연, 송화, 서흥, 봉산, 황주
평남	중화	평양, 용강, 은산(순천)		평양부, 강동, 성천, 안주, 덕천, 중화, 용강	진남포부, 중화, 강동, 성천, 순천, 평원, 덕천, 영원, 맹산, 양덕
평북	의주	태천, 곽산(정주), 용천, 벽동, 위원, 박천	영변, 운산, 구성, 창성, 정주, 가산(박천)	의주, 초산, 삭주, 정주, 선천, 영변, 구성, 강계	의주, 운산, 태천, 구성, 용천, 삭주, 창성, 벽동, 초산, 위원, 강계

40) 朴賢緖, 「3.1운동과 천도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233면.

41) ① 신포덕 우수지역: 『天道敎月報』, 1911.3; ② 3.1운동 발생지역: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 (2019.02.20 검색).

함남	북청	덕원(원산)	홍원	함흥, 영흥, 북청	정평, 영흥, 홍원, 북청, 이원, 단천, 풍산, 삼수
함북				鏡城	성진, 경성

* 신포덕 우수지역의 군명은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옛군명', ( )은 통폐합 이후 군명.
** 1914년 7월 37개 천도교 대교구 설치 군명.
*** 천도교도가 3.1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군명(기독교도와 함께 조직한 경우도 포함), 그러나 운동 참여농민 중 천도교도가 다수 있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제외.

1911년 포덕(布德) 우수지역에 충북, 경북, 경남, 함북의 지역은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황해, 평남, 평북의 서북지역이 많이 선정되었으며, 특히 평북이 두드러진다.[42] 이렇게 형성된 1910년대 천도교의 교세를 바탕으로 전국의 37개 대교구를 설치하는데, 대교구 설치 지역 역시 교세와 관련이 깊다. 현재 신도가 많은 곳과 각 도의 중심지(경성부, 청주군, 전주군, 진주군, 대구부, 평양부, 함흥군, 鏡城군)가 안배된 것으로 보인다. 천도교 중앙지도부와 대교구-교구는 교구 핵심인물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조직적으로 배포했다.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곳은 경기도, 전라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였다. 경기도는 경성부와 개성군에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황해도는 3월 1일에 '연백군, 해주군, 옹진군, 서흥군, 봉산군, 수안군, 황주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경성과 거리상 가까운 점도 있지만, 3월 1일 당일 이렇게 여러 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된 것은 천도교구를 통한 조직적 배포였다. 반면 평안북도는 천도교 교세가 가장 센 곳이었지만, 3.1운동의 시작은 기독교 계통으로부터였다. 3월 1일 의주군의 예수교회당, 선천군 미션스쿨 신성학교(信聖學校)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3월 1일 의주와 선천 시위는 대규모로 진행되면서 천도교인들도 합세하였다. 3월 3일에는 영변군, 용천군, 삭주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시위가 일어났다. 이곳도 기독교와 천도교가 조직적으로 합세하여 시위가 일어났다. 평안북도는 천도교 교세도 매우 확장되었지만 기독교 교세도

42) 구한말 평안도 지방의 동학(천도교) 수용 및 전파 과정 및 그 특성에 대한 연구는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東亞硏究』 제21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0 참조.

매우 강했다. 이들 세력이 합세하여 평안북도는 3.1운동이 가장 격렬하게 일어난 곳이 되었다. 평안북도에서 의주군(3월 1일)과 삭주군(3월 3일)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다가 3월 30일에서 4월 2일경까지 삭주-구성-창성-벽동-초산-운산-위원군의 천도교도의 조직적인 시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 지역은 특히 천도교도가 많았던 지역으로 3월 1일 이후 개별적 시위를 지켜보다가 3월 말 4월 초에 집중적으로 조직적인 시위를 일으켰다.

평안남도는 3월 1일 천도교구를 통해 용강군, 중화군, 강서군, 양덕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3월 2일부터 대동군, 용강군, 중화군, 강서군에서 바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3월 2일 중화군에서는 상원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는 시위가 발생했다. 강서군에서는 3월 3일 강서면 읍내시장에서 기독교도와 천도교도 4천여 명이 고종황제 추도식을 개최하며 시위를 벌였고 여기에 헌병이 발포하여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천도교구는 진남포부(용강군)-강서군, 양덕-성천-덕천-맹산-영원군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면서 천도교도 주도의 대규모시위가 발생했다. 특히 맹산군의 경우 3월 6일 천도교도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시위가 발생한 이후 연일 시위가 이어지다가 3월 10일 천도교도가 맹산헌병분견소를 습격하며 시위를 벌이자 100여 명의 시위자에게 헌병이 발포하여 무려 54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것은 천도교도의 조직적인 시위였다.

황해도는 도 전체적으로 천도교 세력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황해도는 기독교 세력 역시 강력해서 두 세력이 함께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중 수안군은 천도교도 주도 시위의 핵심지역이었다. 3월 1일 수안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고, 3월 3일부터 9일까지 시위가 이어졌다. 인접한 신계군과 곡산군은 시위 자체는 활발하지 않았지만 천도교도의 활동이 이어졌다. 황해도는 천도교, 기독교 세력이 모두 강력한 만큼 이 두 세력의 연대하에 3.1운동이 발생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하면 3.1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다.

다음 강원도와 함경남북도의 천도교 주도의 3.1운동 전개 양상을 살펴보자.

강원도의 천도교구를 통한 독립선언서 배포와 시위 양상은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2월 28일 평강군 천도교구장 이태윤은 독립선언서 600매를 수령하여 평강으로 내려와 교구를 통해 배포하였다. 평강대교구는 3월 1일 철원군, 김화군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3월 2일 회양군, 이천군에, 3일 통천군에 배포하였다.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이 지역 3.1운동은 4월 초순부터 4월 15일까지 천도교도에 의한 조직적인 시위가 집중되었다. 한편 영서지역에는 3월 10일 횡성대교구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어 평창군, 정선군으로 배포되었고, 4월 초순 천도교도에 의한 시위가 발생했다.

함경남도는 3월 2일 천도교구를 통해 영흥군과 정평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고, 이어 함흥군, 북청군에서 천도교도의 조직적인 시위가 전개되었다. 함경남도에서 천도교도의 시위가 가장 두드러졌던 곳은 북청군이었다. 3월 8일 북청군의 중심지 노덕면에서 천도교도, 주민 250여 명이 참여한 시위가 발생한 이후 군내 17개 면 중 10개 면에서 천도교도와 학생들의 주도에 의한 대규모 시위가 다수 일어났다. 북청군은 1911년 1등 포덕지역이었고, 대교구가 설치된 지역이었다. 북청군을 중심으로 단천-이원-풍산-갑산-삼수군의 개마고원 험지에 천도교도에 의한 시위가 발생했다. 정평군, 함흥군, 홍원군도 천도교도에 의한 시위가 발생했다. 함경북도의 천도교도의 조직적 시위는 미약한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남부지역의 천도교도 주도의 3.1운동 상황을 살펴보자. 삼남지역 특히 호남지역은 동학농민운동의 출발점이자 주격전지로서 천도교의 영향력이 온존 유지되었을까.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천도교의 교세가 확장되었지만 그 중심지는 서북지역이었다.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포덕 상황은 북부지역에 비해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은 옛 동학의 중심지로서 천도교의 교세가 적지 않았다.

3.1운동에서 천도교의 조직적인 운동 양상은 전라도 지역에서 나타났다. 3월 1일 익산대교구에 독립선언서가 전달 배포되었고, 2일 전주-임실-남원-장수군으로, 남원에서 구례-순천군으로 전달되어 각 면 교구에 독립선언서가 부착되었다. 순창군은 3월 3일 전달되었다. 이처럼 전주-임실-남원-장수-순창-구례-순천군으로 이어지는 천도교도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시위 계획, 익

산-김제군 지역으로의 전달 루트가 있었다. 익산군은 군산부 및 논산군을 중심으로 한 충청남도 남부지역으로의 독립선언서 전달의 루트이기도 했다. 천도교구를 통한 이 지역에 독립선언서 배포는 3월 2일에 바로 이루어졌지만, 전라도 지역에서 시위는 3월 하순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천도교 중앙총부는 3.1운동을 준비하면서 3원칙(대중화, 일원화, 비폭력화)을 채택했다. 대중화를 위해 각 교구를 통한 교도의 동원을 지시했고, 기독교・불교・학생세력과의 연대를 모색했다. 그리고 방식은 비폭력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천도교 교구를 통한 공식적인 독립선언서 배포와 시위 조직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천도교 벨트' 혹은 '천도교 존(zone)'이라 할 수 있는 지역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천도교도에 의한 3.1운동 발생 지역 (천도교 벨트)[43]

도별 명칭	해당 군명	특징
평안북도 압록강벨트	의주-구성-삭주-창성-운산-벽동-초산-위원	3월 1일 의주, 3일 삭주에 독립선언서 전달・배포/ 3월 30일에서 4월 초순까지 집중적으로 조직적 시위 발생
평안남도 동부벨트	강동-성천-양덕-맹산-영원-덕천	3월 2일 독립선언서 배포, 이어 3월 5일 이후 대규모 시위 발생, 헌병 발포로 사망자 발생
평안남도 서부벨트	진남포(용강)-강서-중화	3월 1일 독립선언서 배포와 함께 대규모 시위 발생, 사상자 발생
황해도 동부벨트	수안-신계-곡산	
함경남도 북동벨트	북청-단천-이원-풍산-갑산-삼수	3월 8일 북청에서 시위 발생 이후 3월 15일 전후까지 조직적 시위 발생
강원도 북동(경원선)벨트	철원-평강-이천-김화-회양-통천	3월 1일부터 3일까지 평강대교구를 통해 독립선언서 배포, 4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조직적 시위 발생
강원도 영서벨트	홍천-횡성-원주-영월-정선	3월 10일 횡성교구에서 원주-영월-정선의 영서지역으로 독립선언서 배포와 시위 발생
전라도 지리산벨트	전주-임실-장수-남원-순창-구례-순천	3월 2일 독립선언서 배포, 임실과 남원에서 3월 20일 이후 4월 초에 대규모 시위 발생
전라도 호남선벨트	익산-군산-서천-논산 / 김제	3월 2일 독립선언서 배포, 조직적 시위는 발생하지 않음

43)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표 4〉를 통해 천도교도들의 주도에 의한 시위형태를 보면 교구를 활용해 3월 1-2일 일제히 독립선언서가 전달, 배포되고 있다. 그러나 중앙지도부의 방침이 비폭력성에 있었던 만큼 독립선언서 배포와 시위 발생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었다. 지도부는 교도들을 통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과 독립의 정당성을 선전하려는 목표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평안남도, 황해도는 바로 시위로 이어지면서 일제 헌병의 과잉대응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대규모 폭력적 시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3월 10일 이후는 더 이상 시위가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평안북도와 강원도 북동벨트는 3월 30일부터 4월 중순까지 천도교도에 의한 조직적인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러한 천도교도 주도의 3.1운동 양상은 천도교 교단조직인 교구제(教區制)와 연원제(淵源制)의 이중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천도교의 외형적 교단조직(교구)과 함께 내적 조직원리로 작동되는 연원제는 시기별로 명칭은 달리해도 천도교 조직의 근본원리로서 관철된 포교・교화조직으로 "전도인(傳道人)과 수도인(受道人) 간에 일정한 권위와 정서적 인간관계가 작용하는 조직"이었다.[44]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지역의 천도교 주도 시위는 죽음을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신념, 조직력을 보이는 경향이 크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인간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연원제가 바탕이 되었고, 이들의 집단적이고 격렬한 투쟁은 지역 주민들의 동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기독교 주도 3.1운동의 지역성

한국의 기독교(개신교)는 개항 이후 1882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선교사 입국과 그들의 헌신적 선교로 전파되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서구적 문명개화'의 정신으로 한국의 근대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

44) 이진구, 「天道教 교단조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淵源制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10권, 한국종교학연구회, 1991. 해방 이전 천도교 교단 조직은 ①抱接制/聯臂制 시대(1860-1905), ②部區(총부-교구)制/淵源制 시대(1906-1922), ③宗理院制/布部制 시대(1922-1940)로 구분된다.

졌다. 기독교는 동학(천도교)처럼 강력한 조직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하거나, 의병투쟁과 같은 물리적 행동을 취하지 않았지만 '의지할 무언가'를 찾는 민중들이 교회로 모여들었다.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민의식'은 거친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했다.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의병투쟁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행하며 강제병합하고, 조선통치에 나선 조선총독부 권력에게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다.

1913년 강원도 경무기관 회의내용을 정리한 〈警務機關會議管內狀況報告諮問摘要〉(1913.6)에 의하면, 고등경찰의 주관심 대상은 종교와 교육에 대한 감시였다. 종교관계에서 유교, 불교 혹은 친일적인 시천교 등이 감시대상이 되고 소수는 '요시찰인'이 되기도 했지만 중심은 기독교 대책이었다. 강원도는 신문화의 유입이 늦어 유교적인 항일의식이나 천도교계 민족주의가 농후한 곳임에도 기독교 감시가 초점이 된 것은 일상의 경찰활동 속에서 기독교도의 언동에 위협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헌병이 훈시를 하고 있어도 진지하게 말을 듣지 않고, 교회당에 가는 조선인은 "언제라도 웃으며 들어"가는 반면, "헌병이나 보조원은 들여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45] 기독교인을 직접적 위협세력은 아니지만, 신경쓰이는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19년 2월 6일경 상하이로부터 선우혁(鮮于爀)이 밀입국하여 선천의 양전백(梁甸伯) 목사를 만나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우리도 독립운동을 전개해야 하고 파리에 김규식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선우혁은 정주의 이승훈 목사, 평양의 길선주 목사에게도 동참을 부탁하여 적극적인 찬동을 얻었다. 평양에서는 평양시내 남녀 기독교학교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위를 추진할 움직임도 있었다. 한편 이승훈은 2월 초 천도교 측으로부터 합작 제의를 받고 서북지역 기독교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2월 중순 선천과 평양으로 가서 이러한 소식을 전했다. 기독교와 천도교의 합작은 무난히 추진되어 2월 27일 독립선언서가 인쇄 완료되자 천도교와 기독교

45)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 校倉書房, 2009, 160-161면.

계는 각자 이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기독교계는 이갑성과 김창준이 이 업무를 담당하여 평양, 원산, 해주, 마산, 개성, 선천, 안주, 진남포, 의주 지역에 학생과 청년신자를 통해 배포토록 했다.[46] 이렇게 해서 3월 1일, 2일 독립선언서는 천도교계의 교구를 통한 배포와 기독교계의 주요 도시 중심의 배포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3.1운동 준비과정과 당시 기독교의 교세를 볼 때 기독교가 3.1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한 지역은 평안남북도와 황해도의 서북지역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또한 천도교의 교세도 강력한 곳이어서 두 종교계가 합작하여 3.1운동을 준비하고 전개해 갔던 점에서 서북지역의 3.1운동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는 천도교계와는 달리 교회 중심의 구조이므로 특정 지역에서 유사한 형태로 시위를 조직하거나 참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교회는 세속권력으로부터 일종의 '해방구'와 같은 공간으로 생각되어 3.1운동 과정에서 교회를 근거지로 삼거나 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총독부 헌병, 경찰은 이러한 교회를 침탈하여 교회를 불태우고, 그곳에 모인 신도와 일반 민중들까지 참살하는 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47] 대표적인 사건이 수원 향남면 제암리사건이다.

〈표 5〉는 3.1운동에서 기독교인들이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시위나 활동을 벌였던 곳을 정리한 것이다. 자료상의 운동 참여자 구분에서 기독교인이라 하지 않았어도 교회나 기독교인이 참여한 시위는 다수일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주도성과 참여도가 두드러지는 지역은 당시 전체 교세와 연관하여 상당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표 5〉 1918년 기독교회(장로교, 감리교) 수와 기독교 주도 3.1운동 발생지역[48]

도명	1918년 기독 교회수	3.1운동 기독교 주도적 참여 군명	특징
경기	398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시위가 발생한 도로서 특정세력 주도의 시위로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충북	60	충주	교인 崔明熽 중심의 충주읍내 장날 시위 계획.

46) 金良善, 「3.1운동과 기독교계」, 『3.1운동 50주년 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240-245면, 259면.
47)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는 불탄 교당이 47개로 집계되었다.

충남	106		
전북	150	전주, 익산	전남북의 기독교인 주도 및 참여는 대부분 천도교인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전남	154	순천, 장성	
경북	295	청도, 경주, 영일, 영덕, 청송, 의성, 칠곡, 김천	남부지역에서는 기독교도 주도의 시위가 가장 많았다.
경남	235	동래	동래면의 기독교도 시위.
황해	365	연백, 금천, 해주, 곡산, 옹진, 송화, 재령, 서흥, 봉산, 신천, 안악, 은율, 황주	재령, 서흥, 봉산, 신천, 안악군의 기독교 주도가 두드러짐.
평남	356	대동, 중화, 강동, 순천, 평원, 강서, 안주, 개천, 덕천	안주군, 대동군-강서군의 기독교도 시위가 두드러짐.
평북	260	정주, 선천, 의주, 구성, 용천, 삭주, 초산, 강계, 자성	정주 오산학교, 선천 신성학교는 3.1운동의 출발점.
강원	162	춘천, 양양, 통천	
함남	130	함흥, 정평, 고원, 이원, 갑산	원산, 함흥 영생학교 학생, 기독교인 주도.
함북	42	성진, 경성(鏡城)	성진 보신학교(캐나다장로파), 욱정 제동병원(선교사 그레이슨운영) 주도.

경기도는 모든 계층이 다양한 형태로 운동에 참여하며 다수의 운동이 발생하여 천도교, 기독교, 학생층 등 주도층을 특정하기 어렵다. 상대적으로 충청도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이 전면에 나서는 시위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라도는 천도교세력과 연대하여 전주군, 익산군, 순천군, 장성군에서 기독교인들의 주도가 나타났다. 남부지역에서는 경상북도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가장 컸고 3.1운동에서도 기독교인의 참여가 컸다. 〈표 5〉에 정리된 지역 외에도 안동군도 임하면 오대교회가 불타는 등 기독교의 참여와 희생은 컸지만, 이 지역 특성상 유림, 지방유지세력의 주도하에 기독교인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황해도는 천도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교세가 전 지역에 걸쳐 강력했고, 그에 따라 3.1운동에도 전 지역에서 기독교인의 주도와 참여가 많았다. 특히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 봉산군의 기독교 주도 시위가 두드러졌다. 평남과 평북 기독교인의 3.1운동 참여는 준비과정의 핵심세력이 이 지역 출신인 만큼

48) ① 교회수: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18년판), 총 2,713개; ② 참여군명, 특징: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교회와 미션스쿨이 강력한 도화선이 되어 3.1운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3월 1일 평안남도 안주군에 기독교도에 의한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고, 평양부와 대동군, 용강군, 강서군에서는 기독교도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바로 이어졌다. 평안북도는 의주군, 선천군, 정주군이 기독교도 시위의 중심지로서 3월 1일 바로 의주군(주내면 의주서교회)과 선천군(신성학교)에서는 기독교도에 의한 시위가 발생했고, 이후 시위는 계속 이어졌다. 3월 4일 정주군 오산학교는 시위 움직임에 휴교를 당했고, 7일 오산학교생과 기독교도에 위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함경도 지역은 함흥군과 성진군이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중심지로서 함흥군의 영생학교, 성진군의 보신학교 등 미션스쿨을 중심으로 3.1운동이 촉발되었다. 특히 성진군에서는 선교사 그레이슨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기독교도 중심의 3.1운동은 도시(府)지역이 월등했다. 3월 1일 경성부, 평양부, 원산부에서 기독교도 주도의 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군산부(구암리), 목포부, 부산부와 함흥면, 성진면, 광주면의 지정면 지역에서도 미션스쿨 학생과 기독교도 주도의 시위가 발생했다. 또한 강점 전후하여 "백성들이 의뢰처가 없어 예수교에 들어가는 자 많음으로 면면이 예배당이오 동리마다 십자가라"[49] 할 정도로 농촌지역의 기독교 전파가 활발했다. 이러한 교세를 반영하여 1919년 3.1운동에서 서북지역과 경북지역은 기독교도들의 주도와 참여가 매우 활발했다.

3) 학생층 주도 3.1운동의 지역성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조선왕조(대한제국)는 근대적 교육개혁을 추진했으나 신분제적 관료시스템하에서 교육의 근대화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그러나 독립협회-애국계몽운동 세력을 중심으로 교육구국운동이 추진되고 이에 따라 '근대적'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가장 많은 학령아동의 초등교육은 각 동리의 소규모 서당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런

49) 『대한매일신보』, 1908.1.19.

상황에서 강점 직후 조선총독부는 1911년 8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여 식민지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제도 마련에 나섰다.

3.1운동 주도층으로서의 '학생'은 1900년대 이후 일본유학생 또는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사립학교의 중등교육 수준의 '근대학교' 학생이 중심이었다. 1919년 3.1운동에서 "근대 학문과 지식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과 청년학생이 각종 선언서와 유인물, 시위경험을 전국적으로 전파했다"[50]는 역할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3.1운동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농촌지역 3.1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학생'은 어떤 존재였을까. 〈표 6〉은 1919년 당시 조선인 대상 학교 상황이다. 전국의 보통학교는 570개로 府郡(총 232개)당 2.5개, 사립 각종학교는 3개, 서당은 104개 정도였다. 1919년 당시 면수는 2,509개 면이므로 1군당 평균 11개 면 정도로 보통학교는 5면 1교, 사립 각종학교는 4면 1교, 서당은 면당 10개 정도가 있었다. 총독부는 1919년에서야 보통학교의 증설을 통한 '3면 1교'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것은 평균치일 뿐 지역적 편차가 컸다. 보통학교는 대부분 공립이므로 군세(郡勢)에 따라 비교적 평균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사립학교는 그렇지 않았다. 일반 사립학교는 함남이 117개로 가장 많았고, 평북 67개, 평남 51개로 많았다. 특히 인구비율로 본다면 함남의 사립학교는 매우 많은 것이다. 종교 사립학교(대부분 미션스쿨)는 평남이 77개로 가장 많았고, 황해 31개, 평북 29개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사립학교는 함남, 평남, 평북이 많았다. 반면 서당은 경기 이남 지역이 북부지역보다 많았다. 함남은 서당 수도 경기 다음으로 많아 전체적으로 매우 교육열이 높았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학교는 총독부 식민지교육기관이었지만, 사립학교와 서당은 총독부의 감시와 간섭을 피해가면서 최소한의 민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51] 총독부는 사립학교와 서당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정책을 취했다. 소규

50) 김정인, 「기억의 탄생 : 민중 시위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현실』 제7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a.

51) 근대 서당의 역할과 3.1운동에서 서당훈도 및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송찬섭,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서해문집, 2018, 224-231면 참고.

모로 기초적인 한문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서당은 보통학교 부족을 보충하는 최소한의 문자교육기관으로 '온존' 정책을 편 반면, 사립 각종학교에 대해서는 근대적 교육방식으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여겨 강력한 억제와 감시·탄압정책을 폈다.

〈표 6〉 도별 3.1운동 당시 조선인 대상 학교 상황(1919년 3월 말)[52]

도별	보통학교				고보	여고보	실업학교					전수	전문	사립 각종			서당
	관립	공립	사립	계			농업	상업	상공	간이	계			일반	종교	계	
경기	2	7	8	80	6	5	1	3		13	17	1	3	53	39	92	2,481
충북		30		30			1			1	2			7	4	11	968
충남		47		47			1			6	7			7	8	15	1,437
전북		45		45			2			10	12			5	13	18	1,539
전남		42	3	45	1		1			7	8			4	8	12	2,417
경북		55		55	1		1			4	5			12	19	31	1,770
경남		43	3	46	1		1	1		4	6			26	10	36	1,854
황해		31	3	34			1			4	5			21	31	52	967
평남		43		43	2	1	2		1	2	5			51	77	128	825
평북		45	1	46			2			3	5			67	29	96	108
강원		33		33			1			5	6			17	7	24	187
함남		27	10	37	1		2			4	6			117	12	129	1,976
함북		24	5	29			1			3	4			43	3	46	501
총계		533	33	570	12	6	17	4	1	66	88	1	3	430	260	690	24,030

1910년대 조선의 교육상황은 아직 총독부의 식민교육기관인 보통학교에 대한 취학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대신 서당과 사립학교를 통한 교육열은 확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총독부 경찰 보고에서도 볼 수 있다. 1917년 삭주헌병분견소(평안북도 경무부, 의주헌병대 소속)에서 작성한 〈관내상황보고〉에서 민심의 경향으로서 심각한 것은 "일반교육사상의 발달-일반적으로

52) 『朝鮮總督府 統計年報』(1919년판).

학업의 필요를 절규하며 도비(都鄙)의 구별없이 그 왕성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령아동의 보통학교에의 자발적 입학이나 여자교육의 발흥, 신교육에 대응한 서당의 증가 등의 현상은 '권리사상'이나 의무심 발달, 법령의 보급 등에 맞춰 모두 '황화(皇化)의 은혜'가 미친 성과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53] 교육열 발화에 대한 총독부의 인식은 양가적이었다. 자신들의 식민지 교육정책에 어느 정도 호응해 오는 조선인에 대해 '皇化의 은혜'라 했지만, 학업을 통해 '권리사상'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교육열을 올리는 조선인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식민지 신민을 양성하고자 했던 식민지교육정책은 권리와 독립에 대한 나비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고, 그것은 3.1운동에서 학생층의 주도와 참여로 나타났다. 경성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府)지역에서는 중등교육기관 이상의 학생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농촌 지역에는 중등교육기관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와 서당 학생이 전통 유림계층과 함께 '지식계층'이었다. 이들은 연령적으로는 10대 초중반의 어린 학생들이었지만, 학교는 식민지배의 축소판으로 '제복과 제모에 칼 찬 선생'으로 표상되는 식민지배의 무단성과 폭력성을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경성부 및 각 府에서 시위가 거세지고 학생들의 참여가 커지자 많은 학교에서 자체적 휴교나 동맹휴학이 발생했다.[54] 휴교가 되자 지방에서 올라와

53) 松田利彦, 앞의 책, 156면.

54) 제1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각급 학교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들 학교 규칙에 의하면 조선 내 학교의 학기는 1학기(4월 1일-8월 31일), 2학기(9월 1일-12월 31일), 3학기(1월 1일-3월 31일)의 3학기제였다. 휴업일은 공식 휴일과 일요일 및 3번의 계절 휴업 기간이 정해졌다. 夏季 휴업(7월 21일-8월 31일), 冬季 휴업(12월 29일-1월 5일), 학년 말 휴업(3월 26일-3월 31일). 「보통학교규칙」(조선총독부령제110호), 1911.10.20. 3월은 3학기의 거의 마지막 기간으로 1919년에는 3월 1일 이후 중등학교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경성부와 각 부의 학교들은 실제적인 휴업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4월 1일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학생들의 출석 상황이 나빠 실제 개학이 늦어지고 있다는 경무부 고등경찰과의 민정보고가 있다. "시내 각 학교의 개교상황, 중등 정도 이상의 각 학교의 개교상황을 보면, 출석 비율은 여름 방학 전의 상황과 같이 여전히 불량함. 학생의 분위기는 여전히 험악함. 그러나 아직 등교생도에 대한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음. 또 기독교 경영 연희전문학교는 재적생도 37명 중 출석자가 5명이기에 개교할 수 없었음.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배재고등보통학

있던 '재경' 학생들이 귀향하는 경우가 많았고, 조직적인 귀향도 있었다. 이들은 33인의 독립선언서 발표와 이어진 대규모 시위를 자신의 고향에 전달하는 전파자 역할을 하였고, 학생=지식인이라는 신뢰는 이들이 고향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선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경성의 중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보통학교 졸업생이었으므로 지역 보통학교 학생과는 선후배 관계였다. 선배의 격려와 열정은 후배들을 만세운동으로 나서게 했다.

〈표 7〉은 3.1운동에 학생층이 주도하거나 참여한 군을 정리한 것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보통학교 학생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시위가 꽤 많았다. 경기도와 그와 인접한 충남지역에서 그러한 현상이 많았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귀향 선배학생의 지도와 그에 호응한 보통학교 학생의 시위형태였다.

〈표 7〉 3.1운동의 학생 주도 및 참여 군명[55]

도명	3.1운동 학생 주도 군명 (보통학교생도 참여)	특징
경기	시흥, 강화, 파주, 안성, 포천, 용인, 고양,개성, 부천, 진위, 장단, 여주	시흥, 강화, 파주, 안성, 포천, 용인군은 보통학교생도 시위가 군내 첫 시위
충북	괴산	청안공립보통학교 생도
충남	아산, 천안, 논산(강경), 홍성, 서산, 예산	아산, 천안군은 보통학교생도 시위가 군내 첫 시위
전북	전주, 김제,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장수(서당)
전남	광주, 곡성, 광양, 보성,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곡성, 광양, 보성(서당) / 강진(유학생)
경북	고령, 경산, 영천, 청송, 안동, 의성, 칠곡, 선산, 예천, 봉화	
경남	울산, 동래, 사천, 하동, 의령, 함안, 창원, 김해, 밀양	
황해	해주, 옹진, 장연, 재령, 서흥, 봉산, 수안, 황주, 은율	
평남	대동, 용강, 순천, 평원, 안주	미션스쿨, 사립학교 중심
평북	정주, 선천, 의주, 영변, 자성	
강원	삼척, 간성, 통천, 철원	
함남	함흥, 북청, 이원, 신흥	
함북	성진, 길주, 명천, 경성, 경흥, 온성, 종성, 회령, 무산	

교, 이화학당은 곧 6일부터 개교할 것이라고 함. 경성고등보통학교 재적수 632명 출석수 402명,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재적수 160명 출석수 106명, 경성공업전문학교 재적수 107명 출석수 30명, 경성의학전문학교 재적수 133명 출석수 59명, 경성專修학교 재적수 122명 출석수 71명, 보성고등보통학교 재적수 309명 출석수 74명, 휘문고등보통학교 재적수 290명 출석수 108명, 중앙학교 재적수 242명 출석수 40명, 양정고등보통학교 재적수 183명 출석수 86명."『民情彙報』.

경기도에서는 3월 7일 시흥군 시흥보통학교, 3월 10일 파주군 교하보통학교, 3월 11일 안성군 양성보통학교, 3월 13일 강화군 강화보통학교, 포천군 포천보통학교, 3월 24일 용인군 금량장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이 군의 첫 시위였다. 이 시위를 시작으로 해당 군에서는 시위가 연이어 발생했다. 개성군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송도면에 송도고보, 한영서원, 호수돈여고 학생들의 시위가 경성부와 비슷한 양상으로 발생했다. 3월 4일 수원농림전문학교 학생들의 동맹휴학, 기숙사 퇴사가 있었다. 부천군, 진위군, 장단군, 여주군에서도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충청남도에서도 3월 12일 아산군 온양보통학교, 3월 14일 천안군 목천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로 이 군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논산군 강경보통학교, 홍성군, 서산군 해미보통학교, 예산군에서도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전라북도는 천도교도들의 시위와 함께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도 전주군, 김제군, 부안군, 진안군, 무주군에서 일어났고, 장수군에서는 서당 생도가 시위에 참여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3.1운동의 발생이 적었던 곳이지만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 광주군은 3월 10일 학생 시위로 시위가 시작되었고, 이후 광주지역 시위의 주요세력이었다. 곡성군, 광양군, 보성군에서는 서당 생도들이 시위에 참여했다.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에서도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보통학교 학생들의 3.1운동 경험은 1920년대 지역 청년운동 및 각종 사회운동의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남지역의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3.1운동 기간의 소극적인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역시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많았다. 전통적인 양반 유생들의 세력이 강했지만 신식교육에 대한 열의도 컸고(보통학교수, 서당수) 이들은 지역 유지・유림세력들과 함께 시위에도 적극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통천군, 간성군, 삼척군의 영동지역에서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있었다. 철원군은 경원선의 주요역으로 재경 학생들의 귀향과 지역학생의 결

55)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합으로 3월 10일 철원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있었다. 평안남북도는 사립학교가 많았던 지역인데, 이들 지역은 종교계 세력이 시위를 주도하며 상당히 폭력적인 시위가 전개되었던 만큼 미션스쿨이나 교회 청년부의 조직적 참여 형태로 이루어졌고, 보통학교 학생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함경남도는 사립학교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원산부, 함흥군, 북청군은 함경남도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었고, 다른 군에도 많은 각종 사립학교와 서당이 설립되었던 점에서 신식 교육열이 매우 높았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함경남도는 함흥군, 북청군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있었지만, 기타 지역은 역시 종교계 세력이나 장년층이 시위를 주도하는 점이 많았다. 반면 함경북도는 놀라울 만큼 지역 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많았다. 거의 모든 군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했을 정도였다. 이 지역의 3.1운동 관련 소식 주요 전달자는 교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길주군, 온성군 등은 교사가 직접 주도하여 시위를 전개했고, 다른 군의 보통학교 학생 시위도 교사의 지도 혹은 묵인하에 진행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농촌지역 학생들의 시위 참여는 10대 초중반의 보통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연령적으로는 어렸지만, 문맹을 벗어난 '지식계층'이었고 학교를 통해 식민지배를 체현한 세대였다. 귀향 선배나 뜻있는 교사의 격려와 주도에 동참할 수 있는 충분한 민족적 자각과 인식이 있었던 그룹이었다고 생각된다. 종교계나 지역 유지와 같은 장년층의 주도와는 달리 학생층이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한 지역은 경성과 가깝거나 철도 등의 교통망이 연결된 지역이었다. 이는 '재경' 유학생의 귀향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또한 철도를 통해 정보가 들어오고 이를 전달하는 교사와 연결되는 경우 보통학교나 사립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식민지적 경험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농촌지역 학생들은 1920년대 이후 지역사회에서 식민지 말단관리로부터 청년운동, 사회운동의 주요한 리더, 활동가를 배출하는 저수지이기도 했다. 이에 이들의 3.1운동 참여 경험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운동 발생공간의 형태별 특성

3.1운동은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는 기본적인 평가를 받지만, 운동 진행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헌병 경찰의 폭력적 탄압에 폭력적 시위로 발전한 경우도 많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가고 이미 상당한 시위에서 경찰 헌병의 무자비한 탄압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던 3월 말 이후 시위에서는 자위적 차원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발생한 경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3.1운동의 폭력성은 일부 '대응폭력'을 제외하면 조선총독부 헌병 경찰의 폭력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3.1운동의 시위형태에서 운동이 발생한 공간과 지형, 사회적 환경 등과 관련해서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장터시위, 관청시위, 산상-봉화시위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농촌지역 3.1운동에서 가장 대표적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은 "장날 장터에 모인 농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면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모르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 곳곳을 누비는 모습"이다. 조선후기 이후 '유무상통(有無相通)' 논리로 각 지역에 형성되기 시작한 장시(정기시, 오일장)는 한국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강제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일단 민간이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장시를 관리해 온 관례를 따랐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를 느꼈다.[56] 오일장은 농촌지역에서 농산물 유통의 상업적 기능 외에 농촌 금융과 특히 문화적・오락적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었고, 정보가 모이고 유통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장시가 농촌지역의 3.1운동 주요 발생지였다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정보와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장날 장터시위는 4월 1일 충남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아우내장터) 시위로 상징되고 있다. 이화여학교 학생 유관순의 활약이 빛났고, 천안군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청주・진천방면에서 장꾼과 시위참여자 등 3천여 명이 참여한 시위로 일제 헌병경찰의 무자비한

56) 1914년 9월「시장규칙」(조선총독부령 제136호, 1914.9.12.) 공포, 법률제정의 직접 목적은 오일장을 행정・경찰기구가 관리 통제하려는 것이었다. 허영란,「조선총독부의 오일장에 대한 통제 및 활용과 그 한계」,『사학연구』제82호, 한국사학회, 2006, 125면.

탄압으로 수십 명의 사망·중상자가 발생했다.

장터시위가 가장 활발했던 지역 중 하나가 경상남도였다. 〈표 8〉은 경상남도의 3.1운동 발생 상황인데, 전체 257개 면 중 86개 면에서 운동이 발생했다. 운동이 일어난 86개 면 중 장날 장터를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난 곳이 43개소로서 운동발생 면의 48.3%였다. 즉 운동 발생공간의 절반이 '오일장터'였다. 군청소재지면에는 대부분 읍내시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관청시위와 장터시위가 겹치기도 했다.

〈표 8〉 경상남도의 3.1운동 발생 상황과 장시의 운동 발생 상황[57]

부군명	면수	군청소재지	시위발생면수	장시 시위발생면수	시위 발생 시장명
울산군	19	울산면 북정동	3	2	남창시장 / 언양시장
동래군	12	동래면 수안동	6	4	동래읍내시장 /구포시장 /기장 동부시장 / 좌천시장
창녕군	15	창녕면 교상동	3	1	남지시장
사천군	10	사천면 선인동	6	1	삼천포시장
하동군	14	하동면 읍내리	7	5	화개시장/ 하동읍내시장/ 주교시장/ 진교시장/ 안계문암시장
거창군	14	거창면 상동	4	0	
고성군	14	고성면 성내동	3	2	고성읍내시장 / 배둔시장
통영군	16	통영면 朝日町	3	2	통영부도정시장 / 이운면 아주리시장
함양군	13	함양면 상동	2	2	함양읍내시장 / 안의시장
합천군	18	합천면 합천동	9	4	합천읍내시장 / 삼가시장 / 창리시장 / 초계시장
의령군	14	의령면 서동	5	2	의령읍내시장 / 봉곡리시장
함안군	11	함안면 봉성리	5	3	칠원시장 / 함안시장 / 군북시장
산청군	12	산청면 옥동	5	2	단계시장 / 단성성내시장
창원군	15	마산부 都町	9	3	창원읍내시장 (3회연속) / 사파정시장 / 진동(진해)읍내시장
진주군	19	진주면 대안동	4	2	진주읍내시장 (반복) / 일반성면 창촌시장
김해군	13	김해면 동상동	5	4	진영시장 / 김해읍내시장 / 명지면 명호시장 / 장유면 무계시장
밀양군	13	밀양면 내일동	5	2	밀양시장 / 단장면 태룡리시장
양산군	7	양산면 북부동	2	1	양산읍내시장
남해군	8	읍내면 서변동	3	1	남해읍내시장
2부19군	257면		89면 (34.6%)	43 (48.3%)*	

* 장시시위 발생면수 / 시위발생면수.

경남에서 동래군, 하동군, 합천군, 김해군은 군내 4개 이상의 장터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장날 장터시위는 오일장의 성격상 주변지역으로의 확산에 유리한 점이 많았다. 장터시위는 시위를 준비하고 주동한 그룹을 넘어 평소 장을 드나드는 주민, 주변 구경꾼들까지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참여를 불러올 수 있었다. 또한 장꾼들의 네트워크는 시위의 내용이나 실상, 참상을 확산시키는 기제가 될 수도 있었다.

장날 장터시위는 다른 시위에 비해 대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표 9〉에 정리한 시장의 시위 규모는 대체로 1,000여 명을 넘어서는 대규모였다. 동래군 구포시장 1,000명, 기장동부시장 1,000명, 사천군 삼천포시장 500명, 하동군 안계문암시장 6,000명, 함양군 함양읍내시장과 안의시장은 2,000명, 의령군 의령읍내시장 1,000명, 함안군 칠원시장 700명, 산청군 단계시장 수천 명, 창원군 읍내시장 5,000명, 진주군 읍내시장 3,000-6,000명, 김해군 진영시장 2,000명, 밀양군 밀양시장과 단장시장 1,000-1,500명, 양산군 양산읍내시장 1,500명이었다. 장터시위의 규모는 절대적으로도 큰 규모였지만, 각 군별 시위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5일 간격으로 열리는 특성상 같은 장시에서 반복적으로 시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장시장(2회), 창원읍내시장(3회), 진주읍내시장(3회 이상)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음으로 관청시위는 군청, 면사무소, 경찰관주재소, 헌병분견소 및 주재소를 찾아가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때로는 관청 건물과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였다. 관청시위는 군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가 대상지역이다. 3.1운동이 발생한 면 중 군청소재지(면소재지)에서 시위가 발생한 군은 총 220개 군 중 191개 군(86.8%)의 군청소재지에서 운동이 발생했다.(〈표 1〉 참조) 이들 지역에는 군청과 면사무소, 경찰서(경찰관주재소), 헌병분견소(헌병주재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총독부 식민행정과 무단통치의 집결지는 3.1운동의 타깃이 될 수밖에 없었다.

〈표 9〉는 1919년 당시 전국의 경찰 및 헌병기관 배치 상황이다. 조선총독부

57)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는 1910년 강제병합 이후 조선 통치기구로서 경찰을 두었지만, 의병활동이 계속되고 조선인의 민심이 일본에 대한 저항이 강했기 때문에 문관경찰에 더하여 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사경찰인 헌병을 각 지역에 경찰 대신 배치했다. 개항지(일본인 거주지역)나 도시부, 철도 연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경찰을 배치하고 의병 진압에 거점이 되었던 곳, 산간 내륙 지역은 헌병을 배치했다. 面이나 府의 町洞 단위에서 대민 접촉기관은 경찰관주재소/헌병주재소였다. 郡과 府에는 경찰서/헌병분대를 두어 이들을 관할지휘토록 했다. 군(부)-면(정동) 단위의 경찰・헌병관서는 경찰기관 743개소, 헌병기관 1,062개소, 총 1,832개소로 232(220군+12부) 부군에 평균 7.9개소의 경찰・헌병관서가 있었다.

〈표 9〉 1919년 당시 전국의 경찰, 헌병기관 배치 상황[58]

	중앙	도	府・郡	面 / 町洞	1 府郡당 개소
경찰*	경무총감부	도경무부	경찰서	경찰관주재소 /경찰관파출소	1,832 개소 / 232 부・군 -〉 7.9개소
	1 (경성부)	13(도청소재지)	743 개소		
헌병**	조선(주차) 헌병대사령부	헌병대	헌병분대	헌병분견소/ 헌병주재소	
	1 (경성부)	13(도청소재지)	1,062 개소		

* 경찰: 개항지 또는 철도 연변에 배치.
** 헌병: 문관경찰 배치 지역 외에 배치, 특히 의병진압상의 중점지역에 배치.

그렇다면 이러한 경찰(헌병)기관이 있는 곳과 시위 발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자. 충청북도의 사례를 살펴보면(〈표 10〉) 충청북도 10군의 110개 면 중 56개 면에서 시위 및 운동이 일어나 50.9%에 달했다. 옥천군, 단양군을 제외하고 군청소재지면에서 운동이 발생했다. 충북지역에서 경찰과 헌병기관은 인접한 2개의 군단위로 각각 설치되거나(옥천/보은, 제천/단양, 음성/진천) 1개의 군에 경찰과 헌병기관이 함께 설치되기도 했다(영동, 청주, 괴산). 청주군은 도청소재지로서 경찰・헌병기관의 도 수뇌기관이 집결되어 있었다.

58)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부가정보(탄압기구)」,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ocument/select_suppress_list.do(2019.02.20 검색).

충청북도 전체 110개 면 중 경찰・헌병기관은 82개 면에 설치되었고(전체 면수에 대한 비율은 74.5%), 86개의 경찰・헌병기관이 있었다.(1개 면에 복수의 기관이 있는 경우 있음) 충북은 전체면의 2/3 이상 지역에 경찰 및 헌병기관이 있었다.

〈표 10〉 충청북도의 운동발생 상황과 경찰・헌병기관 및 주재면 발생수[59]

부군명	면수	군청소재지	운동발생 면수	군청소재면 발생 여부	경찰・헌병기관 주재 면수 (기관수)*	경찰・헌병기관 주재면 발생 수	경찰/헌병 구분
영동군	11	영동면 계산리	7	○	9 (10)	6	경찰/헌병
옥천군	11	옥천면 죽향리	3	×	7 (7)	3	헌병
보은군	10	보은면 삼산리	9	○	7 (7)	6	경찰
청주군	18	청주면 相生町	12	○	12 (15)	9	경찰/헌병 충청북도경무부/청주경찰서 청주헌병대/청주헌병분대
괴산군	14	괴산면 서부리	9	○	10 (10)	7	경찰/헌병
제천군	10	제천면 읍부리	2	○	8 (8)	1	경찰
단양군	7	단양면 하방리	없음	×	6 (6)	0	헌병
음성군	9	음성면 읍내리	8	○	7 (7)	7	경찰
진천군	7	진천면 읍내리	4	○	6 (6)	4	헌병
충주군	13	충주면	2	○	10 (10)	2	헌병
10군	110		56 (50.9%)		82 (86)	45	

* 경찰・헌병기관수는 1개 면에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경찰(헌병)기관을 타깃으로 한 관청시위는 어느 정도였을까. 충북의 운동발생 면수 56면 중 경찰(헌병)기관이 있는 면에서 운동이 발생(45면)한 비율은 80.3%였다. 시위발생 장소의 80% 이상이 경찰(헌병)기관이 있는 곳이었다. 경찰(헌병)기관을 타깃으로 하는 시위는 무장 진압병력이 있는 곳이므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대부분의 관청시위는 마을 단위로 주민(시위참여자)들이 모여 어느 정도

59)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위세가 갖춰지면 만세를 부르며 행진을 하고, 최종 목적지를 면사무소, 경찰·헌병주재소로 하여 그 앞에서 면행정에 대한 항의표시, 만세삼창 등의 시위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일제 경찰(헌병)은 수백-수천 명의 조선인들이 헌병주재소 앞으로 쇄도하여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졌다. 관청시위의 경우 발포와 검속이 대규모로 이어지고, 몇몇 시위는 '내란죄'를 적용하기도 했다(황해 수안군 수안면시위, 평북 의주군 옥상면시위, 경기 수원군 우정-장안면시위, 경기 안성군 양성-원곡면시위, 경남 창원군 진동면시위).

삼일DB에 의하면 충북지역 시위 중 경찰, 헌병의 발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시위는 총 11건[60]인데, 모두 오일장터와 면사무소, 경찰(헌병)주재소 앞에서 시위하고 나아가 경찰(헌병)주재소를 습격(진입, 투석 등)한 시위였다. 시위대의 규모도 대부분 1,000명을 넘어서는 대규모였다. 관청시위는 무력탄압과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도 조선총독부 행정, 경찰기구를 직접 찾아가는 시위로서 3.1운동에서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조선민중들의 가장 직접적이고 격렬한 저항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장터시위, 관청시위와 함께 3.1운동의 대표적 시위형태가 '산상-봉화시위'였다. 3.1운동에서 '야간에 산 위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형태'의 독립운동이 등장했다. 이 운동은 '야간'에 '산 위'에서 전개된 만큼 경찰(헌병)의 출동이 어렵다는 점,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대치되지 않기 때문에 무력적 폭력 진압을 피할 수 있다는 점, 이에 비교적 자유롭고 안전하게 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참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마을주변의 산에서 전개된 만큼 익숙한 자연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 이동이나 활동이 자유롭다는 점, 준비물이나 도구 없이 간편하게 독립만세를 외칠 수 있다[61] 는 특징을 갖는 운동 형태였다.

---

60) 영동군 1건(4.4, 영동읍내시장시위), 옥천군 2건(3.27, 이원헌병주재소 습격시위/4.3, 청산헌병주재소 습격시위), 청주군 2건(3.30, 미원헌병주재소 습격시위/4.2, 청주경찰서 시위), 괴산군 2건(3.30, 청안경찰관주재소 습격시위/4.10, 도안면시위), 제천군 1건(4.17, 제천읍내 장날시위), 음성군 1건(소이경찰관주재소 습격시위), 진천군 2건(4.2, 석현헌병주재소 습격시위/4.3, 광혜원헌병주재소 습격시위)

한반도는 지형상 산지가 많다. 북동부와 남부의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험한 준령을 제외하면 배산임수의 마을을 형성하기에 알맞은 구릉형태의 산지지형은 산재해 있다. 이러한 지형조건이 산상시위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산상시위는 고산준령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접근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중들과 접촉하거나 보여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봉화'는 일제 자료에는 '篝火・焚火・烽火, 화톳불'로 표기되었는데 평지에서도 야간에는 행진을 하면서 횃불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봉화는 대부분 산상(高地)에서 진행될 때 시위를 알리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상-봉화시위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였을까. 〈표 11〉은 산상-봉화시위가 있었던 군을 정리한 것이다. 산상-봉화시위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북도가 뒤를 이었다. 반면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원주군을 중심으로 홍천군, 횡성군의 영서지역에 산상-봉화시위가 발생했다. 황해도에서도 남부지역인 해주군과 평산군에서 산상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그 이북지역 평안남북도, 함경남도에서는 산상시위가 거의 없었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험난한 산지가 많은 곳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평지나 도회지로 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3.1운동에서 산상-봉화시위가 있었던 군[62]

도명	산상-봉화시위 발생군명	특징
경기	고양, 부천, 수원, 진위, 안성, 이천, 김포, 강화, 개성, 연천, 광주, 양주, 여주, 장단	강화군 산상시위 가장 많음 (9개소)
충북	청주, 옥천, 보은, 괴산, 음성	청주군 발생시위는 대부분 산상시위
충남	공주, 연기, 대전, 홍성, 서산, 당진, 예산, 청양, 아산, 천안	연기군, 청양군 산상시위 많음
전북	익산, 임실	
경북	달성, 의성, 칠곡, 성주, 김천	
강원	홍천, 횡성, 원주	원주군 산상시위 많음
황해	해주, 평산	
함북	길주, 성진	

61)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146-147면.
62)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사건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home/demons/select_demons_list.do(2019.02.20 검색).

산상-봉화시위가 빈번했던 경기도 강화군과 충청북도 청주군, 충청남도 연기군의 상황을 살펴보자. 경기도 강화군은 3월 13일 강화보통학교 학생 만세시위로 군내 시위가 시작되어 3월 말까지는 부내면(군청소재지면)에서 집중적으로 시위가 발생했다. 3월 18일에는 강화군청 및 강화시장을 중심으로 천도교도, 기독교도가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1만-2만여 명이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발생하였다. 4월 1일 군내 북부지역인 송해면, 양사면, 하점면의 봉화시위가 일어났고, 4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남부지역인 불은면, 선원면, 양도면, 삼산면에서 산상-봉화시위로 이어졌다. 섬으로 이루어진 삼산면은 석모도, 석포도 산 정상에서 봉화시위가 일어났다. 강화군의 두 중심지[부내면, 화개면(옛 교동군 읍내)]를 제외한 8개 면에서 모두 산상-봉화시위가 발생했다. 해안과 섬 지형에서 시위를 알리고 동조하는데 산 위에서 봉화를 올리는 방식이 지역 내에서 유대감을 높이고 시위에 동참하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 충북 청주군은 3월 2일 천도교구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한 후 청주농업학교 학생들의 독립경고문 인쇄와 시위 권유가 있었지만 한동안 잠잠하다가 3월 말부터 각 지역에서 산상-봉화시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3월 23일 옥산면, 강내면, 강외면에서 산상-봉화시위가 시작되었고, 강내면은 26일까지 이어졌다. 4월 1일 북일면, 북이면, 오창면, 옥산면, 부용면, 청주면, 강내면, 강외면에서 산상-봉화시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충남 연기군에서도 3월 26-28일 동면 내 각 리에서 산상-봉화시위가 발생한 후 이어 3월 29, 30일 남면과 전동면에서 산상-봉화시위가 이어졌다. 대체적으로 산상-봉화시위는 3월 말 4월 초 시위에서 많이 나타났다. 3.1운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 지역에 농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분출했던 이 시기에 경찰 헌병기관의 탄압으로부터도 안전하고(게릴라식) 시위에 대한 동조와 확산에도 유용한 산상-봉화시위가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시위가 발생한 공간형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오일장터, 관청 앞, 산상이라는 공간을 활용한 시위는 시위의 참여도, 확산, 목적에서 각각의 특성을 보여준다. 장터시위는 확산성과 참여도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대규모 시위가 많았다. 관청시위는 식민통치의 직접적 지배·가해자였

던 면사무소, 경찰(헌병)주재소를 타격함으로써 시위 참여자의 위험도는 높았지만, 독립과 식민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3.1운동의 목적을 보여주는 데는 가장 적극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나 식민지배세력의 무력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폭력적 진압과 그에 대응하는 폭력이 나타나 폭력시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상-봉화시위는 3월 말 이후 농민들의 지역공동체적 자발적 시위에서 많이 나타났다. 시위참여자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독립과 식민지배 저항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야간에 산 위에서 불(봉화)을 활용한 것이다.

5. 맺음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국사편찬위원회는 조선총독부 각 기관이 생산한 3.1운동 관련 자료를 총합하여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본 연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3.1운동의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1919년 당시 식민지 조선은 전 인구의 75% 정도가 농민이고 농업이 주산업인 농업사회로 농촌지역은 한반도 전역에 걸쳐 한국인 대부분이 살고 있던 공간이다. 농촌지역의 3.1운동 양상은 '전국적', '전민족적' 운동이었다는 평가에 대한 직접적 사실(史實) 확인이 될 수 있다.

근대의 공간은 통치시스템인 '행정구역'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공간성은 행정구역 단위로 분석하였다. 1919년 식민지 조선의 행정구역은 13도 220군 2,509면이었다. 3.1운동은 전국 220개 군 중 212개군(96.4%), 2,509개 면 중 1,019개 면(40.6%)에서 일어났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조선의 행정구역은 13도 317군이었다. 317개의 '옛군'은 조선왕조 이래의 읍치로서 한국인들에게는 자신의 지연(地緣)을 대표하는 공간이었다. 1919년 단계에서도 한국인들에게 '옛군'에 대한 소속감은 여전히 컸다. '옛군' 단위로도 전체 317군 중 289개 군(91.2%)에서 3.1운동이 발생했다. 통폐합 이후 220개 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 군청소재지면의 3.1운동 발생 비율도 86.8%였다. 이는 한반도 거주 주민들의 80% 이상이 3.1운동의 발발과 그 내용 및 의의, 그에 대한

일제(조선총독부) 경찰・헌병의 탄압 양상도 공유하였다고 할 수 있다. 3.1운동 발생 면의 비율을 보면 전체의 40.6%이지만, 3.1운동 발생 면의 비율은 각 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경기도는 총 면수 249개 면 중 184개 면에서 운동이 발생하여 무려 73.9%에 달했고, 경기도와 남북으로 연결되는 충청남북도, 황해도의 비율이 높다.

다음은 3.1운동 주도세력별 공간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천도교, 기독교의 종교세력과 학생세력으로 나누어 이들이 주도한 3.1운동 발생 공간의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천도교는 교구를 활용한 독립선언서 배포와 천도교도들의 조직적인 시위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전라북도 지역에서 '천도교 벨트/존'이라 할 수 있는 천도교도들의 조직적인 운동 참여가 보인다. 반면 기독교는 도시 중심, 농촌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진행되었고, 3.1운동에서도 교회 중심으로 기독교도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특정 지역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상북도 지역에 기독교세가 강했고, 이 지역에서 기독교도의 주도 및 참여에 의한 3.1운동이 발생했다.

1910년대 농촌지역의 근대교육기관은 보통학교와 서당이 유일했다. 농촌지역 보통학교 학생은 농촌의 '지식계층'으로서 학교를 통한 식민지배의 체현자였기에 이들의 3.1운동 참여는 가능했다. 특히 경기도와 충청남도 지역은 보통학교 학생시위가 군내 시위의 첫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1920년대 이후 식민지 농촌사회의 유력자층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이들의 3.1운동 참여 경험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3.1운동 발생 공간의 형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았다. 3.1운동의 발생공간으로 주목되는 것은 장터(오일장)시위, 관청시위, 산상-봉화시위가 있다. 오일장 장시는 조선후기 이래 한국인의 삶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3.1운동에서도 정보와 사람이 모이는 장터는 유용한 운동 공간이었고, 장터시위는 주변으로의 운동 확산에 유리했고, 대규모 시위인 경우가 많았다. 관청시위는 군청, 면사무소, 경찰(헌병)주재소 등 식민통치기관을 직접 타깃으로 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독립과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3.1운동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적극적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운동은 바로 무력 진압이 가능했기 때문에 대응 폭력에 의한 폭력시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상-봉화시위는 관청시위와는 달리 농민들의 지역공동체적 자발적 시위에서 많이 나타났다. 시위참여자의 피해와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독립과 식민지배 저항의 목소리를 지역민들에게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야간에 산 위에서 봉화를 활용하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3.1운동의 전국적, 전민족적, 전계층적 성격을 공간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도세력의 형성, 식민통치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며 3.1운동의 공간성, 지역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분석은 기존 3.1운동 연구에서 진행된 주요 테마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에 머물렀다. 3.1운동이 전민족적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지만 여성 참여는 어떠했는가와 같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 도시지역은 학생이나 기독교신자, 직업여성(기생 등)에서 여성 참여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나 농촌지역은 여성의 운동참여 양상을 살펴보기 어렵다. 자료의 한계인지, 당시 사회인식과 상황에 의한 양상이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해 보고자 한다.

▮ 참고문헌

박은식, 『韓國獨立運動之血史』, 維新社, 1920.
박은식 저, 김도형 번역,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소명출판, 2008.

권보드래, 『3월 1일의 밤—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돌베개, 2019.
김기주, 「3.1독립운동에서 호남인의 참여도 검토」, 『역사학연구』 제37권, 호남사학회, 2009, 69-108면.
김동택, 「한국 근대국가형성과 3.1운동」, 『대동문화연구』 제67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403-435면.
김부성, 「3.1운동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 『지리학』 제19호, 대한지리학회, 1979, 27-40면.
김승태, 「일제의 기록을 통해서 본 경기도 고양지역의 3.1독립운동」,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0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4, 305-347면.
김정인, 「기억의 탄생 : 민중 시위문화의 근대적 기원」, 『역사와현실』 제7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a, 149-174면.
_____,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연구』, 한울, 2009b.
_____,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책과함께, 2019.
김진호,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2 : 3.1운동사(상)』,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_____, 『독립운동사 3 : 3.1운동사(하)』,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동아일보사 편, 『三.一運動 50周年 紀念論集』, 동아일보사, 1969.
류시현, 「1920년대 삼일운동에 대한 기억—시간, 장소 그리고 민족/민중」, 『역사와현실』 제74호, 한국역사연구회, 2009, 175-202면.
박걸순, 「충북지역 3.1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중원문화연구』 제15집,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10, 1-31면.
박찬승, 『1919—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 다산초당, 2019.
박헌호·류준필 편, 『1919년 3월 1일에 묻다』, 성균관대 출판부, 2009.
송찬섭, 『서당, 전통과 근대의 갈림길에서』, 서해문집, 2018.
양낙흥, 「평양대부흥의 시대적 배경과 그 본질」, 『역사신학논총』 제13권, 한국복음주의 역사신학회, 2007, 113-160면.
윤병석, 『증보 3.1운동사』, 국학자료원, 2000.
윤해동, 『지배와 자치—식민지기 촌락의 삼국면구조』, 역사비평사, 2006.
이기훈, 『일제하 광주·전남의 민족운동』, 광주광역시·전라남도, 2016.
이용기, 「일제시기 지역 사회운동의 주도세력 변화와 그 함의—전남 장흥군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31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167-198면.
이정은,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233-273면.
_____, 『3.1독립운동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 국학자료원, 2009.
_____, 「3.1운동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광복70년,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

위원회, 2016.
이진구, 「天道教 교단조직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淵源制를 중심으로」, 『종교학연구』 제10권, 한국종교학연구회, 1991, 65-88면.
조규태, 「구한말 평안도지방의 동학—교세의 신장과 성격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東亞硏究』 제21집, 서강대 동아연구소, 1990, 49-93면.
조동걸, 『3·1운동의 역사 : 우사 조동걸 저술전집 6』, 역사공간, 2010.
정용욱, 「3.1운동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현실』 제110호, 한국역사연구회, 2018, 269-304면.
최우석, 「3.1운동, 그 기억의 탄생—『한일관계사료집』, 『한국독립운동지혈사』,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을 중심으로」, 『서울과 역사』 제99호, 서울역사편찬원, 2018, 87-126면.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이윤상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8 :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_____, 김정인·이정은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9 : 국내 3.1운동Ⅰ-중·북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_____, 김진호·박이준·박철규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 : 국내 3.1운동Ⅱ-남부』,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_____, 김병기·반병률 저,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1 : 국외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한국사연구회 편,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경인문화사, 2019.
한국역사연구회·역사문제연구소 편,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 100주년 기획위원회 엮음, 『3.1운동 100년 1-5』, Humanist, 2019.
허영란, 「조선총독부의 오일장에 대한 통제 및 활용과 그 한계」, 『사학연구』 제82호, 한국사학회, 2006, 121-157면.
_____, 「3.1운동의 지역성과 집단적 주체의 형성—경기도 안성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경계』 제72호, 부산경남사학회, 2009, 155-181면.

金富子, 『植民地期朝鮮の教育とジェンダー』, 世織書房, 2005.
朴贊勝, 「植民地期から解放直後における地域社会リーダーシップの形成」,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50集, 朝鮮史研究会, 2012, 13-35面.
松田利彦, 『日本の朝鮮植民地支配と警察—1905-1945年』, 校倉書房, 2009.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samil/.

【Abstract】

Spread and the Regional trends of 3.1 Movement in Rural Area

Lee, Song-Soon*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3.1Movemen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created a "3.1. Movement Database" by compiling all the data that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produced on 3.1 Movement. This research utilized the data from this database to explor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3.1 Movement that took place in rural areas.

In 1919, the 3.1 Movement took place in 212 Gun/county out of the total of 220 (96.4 percent), and 1,019 Myeon/township out of the total of 2,509 (40.6 percent). The movement took place in 289 traditional Gun, an administrative unit different from Gun of nowadays, out of the total of 317 (91.2 percent). 86.8 percent of the Myeon where county offices were based experienced 3.1 movement. In other words, more than 80 percent of the residents in the Korean peninsula participated in or experienced 3.1 movement.

There is a trend in what kind of groups were in leadership of 3.1 movement in each region. The followers of Cheondogyo employed dioceses to distribu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organized protests around certain regions, which led to the emergence of 'Cheondogyo belt'in PyeonganNam,buk-do/province, HamgyeongNam-do/province, Kangwon-do/province and JeollaBuk-do/province. Christians organized their movements around their churches in both urban and rural area, which means there was not a Regional trends of their movements. Student-led movements were spearheaded by elementary (primary) school students, and such movements played a keyrole in Gyoenggi-do and ChungcheongNam-do.

The 3.1 Movement can be categorized by where each movement was initiated. The categories are marketplace protest, county office protest, and the hill-torch protest. Marketplace protest was strategically advantageous in spreading the movement to neighboring regions, and usually were large-scale movements. County office protests

* Research Professor, Center for Korean History, Korea University.

directly targeted the colonial government buildings such as the police office, county office and township office, which were often suppressed through physical violence. Violent protests rose against such suppressions. The hill-torch protests were initiated autonomously by the farmers in community units. This type of the movement enabled the participants to minimize the casualty rate while maximizing the efficacy of the delivering the message of resistance by using the torch on hill tops.

Keywords: 3.1 Movement (March 1st Movement), administrative district, Gun/county, Myeon/township, Cheondogyo, Christian, elementary (primary) school, student,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protests, a five-day interval village market, township office, police, military police, torch.

접수일: 2019.06.27 ‖ 심사일: 2019.07.16 ‖ 게재확정일: 2019.08.09